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영|저|널

THE CRITICAL JOURNAL OF MANAGEMENT AND ECONOMY

세무사박장덕사무소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신고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신고

TEL: 053)761-5200



COVER STORY / 김슈남대천교수

정책제안 / 지방공기업 부실병만 경영심각, 낭비적요소 제거 필요

기획특집 / 지자체 스토리텔링 열풍

인물FOCUS / 대구경북최초 '북극의장성'받은 탈세규회회구성자 의원

시사논란 / 대부동류장 건설, 타당성 조사 미흡에 특혜 논란까지, 약일까? 득일까?

기업탐방 / 친환경 시멘트기업, 에코에브리웨어 스페어

청호평론 / 정부예산가스 감축목표, 부작용만을 대책 세워야

부동산가이드 / 전국 16개 KTX역세권 본격 개발

등 권 제 21 호
2009. 12



Contents

PHOTO ESSAY	02	"한 해를 마무리하며"
NEWS WIDE	04	NEWS
COVER STORY	06	김수남 예천군수
정책제안	10	지방공기업 부실 방만 경영 심각, 낭비적 요소 제거 필요
정책조명	12	경북 구미, 김천, 상주 태양광 산업 중심지로 부상
기획특집	14	지자체 스토리텔링 열풍
인물FOCUS	16	대구경북 최초 '구회익장상' 받은 달서구의회 구성자의원
시시논단	18	대구 돌구장 건설, 타당성 조사 미흡에 특혜논란까지
테마산책	20	쓰레기 매립 가스는 '돈'이다
기업탐방	22	친환경 사회책임기업, 예코 에브리웨어 스퀘어
개정법규	24	최근 개정법규 소개
법령해설	25	국가법령 해석
계약리뷰	26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감사원 적발
청호평론	27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작용 막을 대책 세우야
부동산가이드	28	전국 16개 kt지역세권 본격 개발
생활경제	30	동절기 준비는 일뜰 중고장터에서
지자체는 지금	32	'항금알' 경매장 유치, 시군경쟁 치열
리더 추천릴레이	34	간디문화센터 문창식 대표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연 5만원 | 신청방법 T. 053) 766-1368 | 이메일 wsd79@naver.com
 성함·주소·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하관일 경우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이름 기재)
 구독료 납입계좌 국민은행 698301-04-034744 (주)에코

<독자투고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칼럼과 평론 및 현장경험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지 1장(글자크기 10) 분량으로 경영저널 편집국으로 보내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38-3번지 경영저널 편집국
 TEL. 053) 766-1368 FAX. 053) 766-1356
 이메일. chojs333@naver.com

경영저널 www.ecomanagement.co.kr

통권 제21호 | 발행인 이진구 | 편집국장 조종성 | 등록번호 경북다0123 | 창간 2007년 11월 5일
 편집위원 이준현, 정성민, 강석원, 윤일형, 최재팀장 우성덕 | 기자 이준혁, 장경태, 홍순대, 손지강
 서울·경기취재본부 031472-2061 울산·경남취재본부 052223-2261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약5길 18 1동 301호 TEL. 053766-1368 | FAX 053766-1356
 E-mail chojs333@naver.com | 가격 2,500원 | 인쇄 삼영정밀인쇄사

구미시 내년도 예산 최초로 1조원 넘어



경북 구미시 내년도 예산이 최초로 1조원을 넘었다. 구미시는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올해 당초예산보다 3714억원(47.1%) 증액된 1조1598억원으로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6388억원, 특별회계는 5210억원이다.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는 지방세 1983억2300만원, 세외수입 664억8200만원, 지방교부세 1482억1100만원, 재정보전금 299억7300만원, 국·도비보조금 1608억1100만원 등이다. 세출은 사회복지분야 1433억4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485억6200만원, 수송 및 교통 593억2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60억8700만원, 농업분야 630억1500만원, 환경분야 791억51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452억1500만원, 일반공공행정 등 기타가 1841억4400만원이다. 특별회계는 올해 추경에 신설된 공업용지조성 3378억3000만원, 수질개선사업 68억6400만원, 의료보호기금 24억1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67억5000만원, 차수사업 63억1000만원, 도시교통사업 147억8000만원 등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올해에 비해 당초예산이 47.1%나 크게 증가한 것은 구미국가산단 확장단지 조성사업 용지보상금 3378억원이 편성되는 등 국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계층 보호 및 사회복지 예산 확충에 가장 많은 재원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안)은 12월3일부터 12월16일까지 의회심사를 거쳐 12월17일 확정된다.

내년도 예산 경산 4970억원 김천 5080억원 편성

경북 경산시 내년도 예산이 올해와 비슷한 총 4970억원 가량으로 최종 확정됐다.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 25억원(0.5%) 증가된 액수로 일반회계는 4181억원, 기타특별회계 152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37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877억원, 세외수입이 288억원이다. 또 자체재원은 1165억원(27.9%), 지방교부세 1432억원, 재정보전금 166억원, 국·도비 보조금 1368억원 등 의존재원은 2966억원(70.9%)이다. 지방채는 50억원(1.2%)으로 정해졌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올해에 비해 자체재원이 96억원이 감소했고 의존재원은 교부세가 47억원이 줄어든 반면 재정보전금은 40억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교육도시 건설에 83억원, 농촌경제 살리기 및 전략산업 구축에 591억원,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구축에 186억원, 환경복지 부문에 1591억원, 기반시설 확충 등에 986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시는 남매근린공원 및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남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IT융합부품 실용화 센터 건립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북 김천시는 2010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280억원 늘어난 5080억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예산으로 최초로 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일반회계가 427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10억원이다. 일반회계 주요재원은 지방세수입 430억원과 세외수입 580억원 등 자체재원이 1010억원이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004억원, 재정보전금 95억원, 국·도비보조금 1161억원이다. 국·도비보조금은 올해 비해 18.3% 늘어났다. 세출예산은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한 농업·농촌분야 및 지역개발에 1344억원(31.49%),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진복지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분야에 929억원(21.76%),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94억원(13.91%)이다. 특히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 (주)KCC와 투자유치로 조기 분양됨에 따라 내년도 2단계 조성사업을 당초보다 1년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이달 18일 최종 확정된다.

지자체 축제 브랜드 관리 '소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축제를 지역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브랜드화를 위한 상표나 서비스표 출원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57개의 올해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 예비 문화관광 축제 가운데 26개만 상표 및 서비스표 출원이 이뤄져 출원율이 45.6%에 그쳤다. 특히 이 중 유망 축제와 예비축제 출원율은 더 낮아 각각 35.3%와 33.3%에 불과했다. 대표 축제로 선정된 '보령 머드축제'와 '안동국제탈춤축제'는 모두 서비스표 등록이 됐지만, 8개 최우수축제 가운데 6개, 9개 우수축제 중 5개, 17개 유망축제 중 6개, 21개 예비축제 중 7개만 상표가 각각 출원됐다. 이 중 상표 및 서비스표가 등록된 축제는 대표축제 2개를 포함, 모두 19개다. 특허청 관계자는 "축제가 유명해진 뒤 브랜드 관리를 하기보다는 예비축제 선정 당시부터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을 해 관리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울산시 202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울산시가 3대 미래상을 제시한 2025년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시에 따르면 2025년의 3대 미래상으로 국가기간 산업 및 첨단산업도시, 국제무역 및 물류거점도시, 생태환경 및 문화복지도시를 제시했다. 계획 인구는 2008년 말 현재의 112만6천879명보다 32만3천121명 증가한 145만명을 목표로 세웠다. 미래상에 맞도록 지식기반형 첨단산업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육성, 산업지원 및 물류기반 구축,

KTX 경제권구축, 아름답고 푸른 생태환경 조성, 품격 높고 여유로운 문화복지 실현 등 8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산업구조 고도화, 고부가가치 첨단 지식기반산업 육성, 과학기술대학 등 대학의 체계적 육성, 세계 속의 도시브랜드 창출 등 15개 세부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광역경제권 개발정책,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부상, 울산신항만 건설,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개발 등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시는 이를 위해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행정협의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이 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부산시 시내버스 요금 100원 인상 추진



부산시는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평균 100원가량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달 중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시내버스 요금을 성인기준 평균 1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시는 물가대책위에서 요금 인상계획이 확정되면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2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확정되면 2006년 5월 요금인상 이후 3년6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부산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1천원(교통카드 950원), 청소년 700원(교통카드 650원), 어린이 300원(교통카드 250원)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007년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인한 적자가 내년에 1천억 원에 육박해 불가피하게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COVER
STORY

프로필

1943년 경상북도 예천 출생 / 경희대학교 체육학 졸 / 예천군의회 의장 / 새마을 운동
예천군지회장 / 1998년 예천군수 당선 / 현예천군수

김수남

예천군수

'물 맑고 인정많은 충
효의 고장' 경북 예천
이 희망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경북
도청 이전과 정부의
곤충산업 특구 지정
등은 신성장 동력의
날개를 달아줬다. 경
북 행정, 경제의 신중
심지로 주목받고 있
는 예천.

11년째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김
수남 예천군수를 만
나 정책과 비전에 대
해 들어봤다.

글/ 우성덕 취재팀장
사진/ 예천군청제공



1 이제 내년까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 다. 3선을 연임하면서 군정을 맡아 오신 소감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군수로 취임해 군정을 수행한지 벌써 11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정말 세월이 우수하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어렵고 힘들었던 일도 많았지만 한편으로 변화된 새로운 모습들을 볼 때마다 많은 보람과 긍지도 느낍니다.

군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공직자들과 힘을 합쳐 우리 예천의 발전과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자세로 군정에 임하면서 오늘날까지 그 마음을 한번도 잊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여러가지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 주민들이 바라는데로 다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 분야에서 도전적이고 활력 넘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고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출향인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예천군'은 신성장 동력으로 곤충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천군의 곤충 산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998년 군수로 취임하면서 우리 예천이 잘 살수 있는 길은 농업을 육성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업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산업곤충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육성책입니다. 1998년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산업곤충연구소를 설립해 화분매개곤충인 "머리빨가위벌" 연구를 시작해 농가에 보급했고, 2003년부터는 호박벌 연구에도 착수해 현재 국내 생산량의 15%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는 전국의 농가에 보급해 ha당 260만원의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와 수입대체 효과 등을 감안하면 5년간 87억원 정도의 소득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2007년부터는 중국 길림성 양봉과학연구소 및 농진청과 MOU를 체결하여 전국 최초로 "중봉 육종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용곤충사업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수록되어 있는 흰점박이꽃무지(일명 풍뎡이)를 향암 작용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뽕나무를 사료로 이용해서 "예천산 뽕굼뎡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에 지정된 "예천 곤충산업특구"는 우리 예천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해 곤충산업도시 예천군의 밝은 미래를 위한 또 하나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3 경북 도청 이전을 계기로 예천군은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예천군의 장기발전계획은 무엇입니까?



2008년 6월 8일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로 예천과 안동이 선정되면서 우리 예천은 경북발전을 선도할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은 총 사업비 2조5천억원, 생산기대 효과 6조원, 고용유발효과 38만 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예천의 급격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인구 10만 이상의 신도시가 건설되면 예천군은 경상북도 행정, 경제 신중심지로 지역위상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 도시구조 및 인구구성 변화, 지역특성 변화로 경북북부권 거점도시화, 대경권 2-post 중심체계 구축, 중부내륙권 신중심도시로서 위상 강화와 초광역권 교류 거점의 중심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도청시대에 예천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도시교통, 문화관광, 농업산업, 교육 등 각 부문별 발전전략과 전략 사업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연 친화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예천을 중심시가지 재정비사업, 국립양궁원 건립사업을 비롯해 은하수공원 조성사업, 인재양성 종합지원사업, 식품생태, 바이오기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그린에너지 빌딩 농장 조성사업 등 8대 전략사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부문별 단위 사업을 수립해 향후 중장기 연차별 계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4 예천군은 전국 최고의 테마관광지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의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군의 관광자원으로 최고의 물도리 마을인 회룡포 조선 태조가 도읍지로 정하려 했던 십승지 중 하나인 금당실마을,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동운부군옥책판”이 보관되어 있는 예천 권씨총택 및 종가별당, 천년고찰인 용문사, 명봉사, 보문사와 명승으로 지정된 초간정, 선몽대 등 많은 문화재와 천혜의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는 충효의 고장입니다. 옛 것에서 새로움을 찾아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예천을 전국 최고의 “테마관광지역”과 “유교문화”의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14개 사업에 556억여원을 투자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테마관광 개발사업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충효정신을 일깨워 주기 위해 감천면 포리관광지에 충효테마공원을 조성, 충효관을 건립했고, 상리면 용두리에 명심보감 효행편에 수록된 효자 도시복의 생가를 복원하고 도시복의 효행에 대한 이야기를 형상화했습니다.

충효관은 충효에 대한 이야기 중심으로 충효에 대해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있도록 꾸며놓은 충효에 대한 체험 전시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삼강 강문화 체험단지 개발과 회룡포 개발, 곤충생태원 조성, 산림테라피단지 조성, 내성천 리버도로 조성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경북 북부지역 최고의 문화관광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5 예천군은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증진을 위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로 처음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농정을 군정 제1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총 투자사업의 45%라는 많은 예산을 농업부문에 투자해 경쟁력 있는 농특산물을 생산, 농가소득증대와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에서 시행한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면 지난 1998년 전국최초로 시장개척단을 군수직속으로 조직해 자매도시와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등 전국각지를 누비며 지역농산물에 대한 시장개척활동을 활발히 펼쳤습니다. 그 결과 농산물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농업의 단단한 버팀목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또 맞춤형 농정구현을 하기 위해 작목반과 농가의 수준에 따라 작목과 지역특성에 맞게 우수작목반을 선정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를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소비자 초청 행사로 예천군의 차별화된 친환경농업정책과 맑은 물, 오염되지 않은 땅,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친환경농산물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예천군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예품”은 예천의 품격 높은 농산물이란 뜻으로 개발해 때 묻지 않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생산해 품질관리 수준과 대외신인도 등 엄정한 현장심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통양잠산물 바이오산업을 비롯해 지역특화작목을 개발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균제를 활용한 예천참우의 브랜드기치를 집중 육성했습니다.

또 1읍면 1혁신마을을 조성해 미래농촌의 활로를 모색하며 6차 산업 육성에도 적극 노력해 시군단위 중 경북에서 가장 많은 5개소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이를 통한 지역관광자원과 농업을 접목해 농가소득증대와 농업발전을 위해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 군수님께서는 예천군민장학회 이사장 직은 겸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짚어질 지역 인재 육성 정책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해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이농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구가 날로 감소하면서 교육기반은 물론 지역경제 마저 침체되어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장학재단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에 “우수인재 양성이 예천발전의 자산입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뜻을 같이하는 발기인 17명과 함께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예천군민장학회는 군비출연 50억원을 비롯해 군민, 출향인 등 각계각층에서 출연하는 기부금 50억원을 포함,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범군민적인 참여 속에 11개월만에 군비출연금 45억과 기탁약정금 38억원을 합쳐 83억원이라는 놀랄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재)예천군민장학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육성과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조성된 장학기금은 향후 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급은 물론 학교교육에 필요한 기자재와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과 육성, 우수 교직원 및 중고등학교 교육경비의 지원 등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7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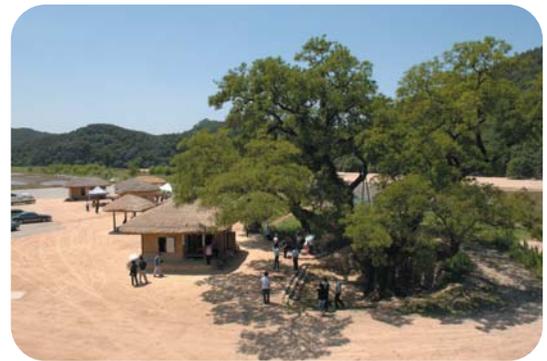
3선 군수라는 영광을 주시고 또 오늘날까지 대과없이 군정을 수행해 올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임기를 마치는 그 날까지 우리군이 잘 살수 있고, 군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나에게 남은 모든 열정을 다 바쳐 마지막으로 인심 좋고 인정이 넘치는 고장, 누구나 한번쯤 와보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풍요로운 고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훈자가면 단순한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 그리고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마치는 그 날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리라 저는 굳게 믿으면서 군민 여러분들께 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예천군장학회현판식



▶ 삼강주막



▶ 용문사전경

정책제안

정책제안 _ 편집문



지방공기업 부실 방만 경영 심각 낭비적 요소 제거 필요

지방공기업의 부실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기업에 대한 선진화 방안이 추진되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구조 개선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방공기업 문제의 핵심은 방만한 조직 운영과 누적된 적자구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사업의 수익성과 효율성, 경제성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우후죽순 생겨난다. 경영 능력을 고려치 않은 단체장들의 낙하산 인사 등 다양한 문제에서 비롯됐다. 대다수의 지방공기업은 이미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2007년말 기준 지방예산의 34%에 해당하는 38조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부실한 방만 경영 개선과 낭비적 요소를 제거할 필요성은 늦추지 말아야 할 해묵은 과제가 됐다.

지방공기업 무분별한 설립으로 경영 상태 악화

지난 10년간 지방공기업들은 무분별한 설립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1998년 218개에서 2002년 252개, 2005년 312개에서 2008년 350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종사자 수도 1998년 4만 3062명에서 2007년에는 6만 1944명으로 늘었다. 이는 특정한 사업에 따른 설립이 아닌 개발이익에 대한 환원을 명목으로 동종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용인시 김포시 등 9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발공사는 경기도시공사(주택토지개발사업)와 업무가 중복돼 있고, 춘천도시개발공사는 강원도개발공사(춘천G5프로젝트사업)와 중복돼 있다. 지난 8월에는 경산시 의화가 경산시의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에 대해 이미 설립운영 중인 경북도시공사와 기능 중복을 이유로 부결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동일한 지자체가 유사기능을 하는 공사 공단을 중복 설립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개발사업의 경우, 인천개발공사는 인천관광공사, 경기도시공사는 경기관광공사와 중복되고, 시설관리의 경우 부산대구,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은 모두 환경시설공단과 업무 중복이 되고 있다. 또 기초단체가 사업규모, 사업수요의 지속성 측면에서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소규모 공사와 공단을 복수로 설립해 공기업의 영세화와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경기 김포시의 경우 김포도시개발공사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경기 용인시는 용인지방공사, 용인시시설관리공단, 경기 화성시는 화성도시공사, 화성시시설관리공단 등이 유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모두 설립 과정에서 내외부 통제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설립 타당성 검토기관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적정여건이 나올 때까지 용역권을 변경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천시의 경우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타당성 검토 용역기관의 보고서를 부정하고, 용역기관을 바꿔 재용역 의뢰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춘천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이로 인해 시민단체와 지자체 간 설립 적정성에 따른 갈등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방공기업 소규모 영세성으로 인한 낭비요인 상존

지방공기업은 대부분 시군구에서 운영될 경우 소규모, 영세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내재해 경영구조가 취약하다. 강 의원의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63개 시군구 공단의 자산은 모두 100억 미만, 이 중 50억 미만도 49개에 달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공단이 자치단체로부터 소요경비 전액을 지원 받는 주차장 등 공공시설 관리 대행사업을 전담하고 있고, 경영 개선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인력 1,407명에 자산 842억이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대행사업(1,622억원, 자체사업(20억))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공기업의 대표인 단체장의 과도한 인사권 행사와 공무원 출신 낙하산 인사 등도 경영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지방공기업의 특성상, 임원 인사권은 단체장에게 집중돼 있고, 이로 인한 인사권형 논란과 자율 책임경영 문제는 항상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임원 임명시 전문성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단체장을 등에 업은 공무원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횡행한다는 점도 경영개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다. 지방공기업의 주요임원 가운데 공무원 출신 사장 비율은 전체의 61%, 상임이사는 65%, 상임감사는 62%에 이르고 있다. 청도공영사업공사와 춘천시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단체장이 소속공무원을 지방공기업 사장으로 파견한 대표적인 경우다.

단체장의 과도한 인사권 행사, 공무원 출신 낙하산 인사 사장 위주 업무추진비 편성 문제

이는 지방공기업 임원 임명과정에 있어 주민과 지방의회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부족하고, 사정에 대한 임면권을 단체장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장추천위원회를 자치단체에 설치, 운영하면서 임명 과정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다. 또 공무원의 이사회 과도한 참여로 내부 지배력이 약화돼 견제와 감사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지방공기업 대다수가 당연직(비상임)이사회로서 현직 공무원이 이사회에 과도하게 참여해 자율 경영의 침체 소지가 있다. 이로 인해 현행 당연직 공무원의 이사 임명이 2~3명 가능하다는 규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경기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는 비상임이사 7명 중 공무원이 3명이고, 대구환경공단, 해사시설공단도 비상임이사 4명 중 공무원 2명이다. 특히 전국 12개 공사공단 중 108개 기관에서 현직공무원이 비상임감사를 겸임해 내부 감사의 독립성이 약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만한 조직 및 인사 운영도 개선돼야 한다. 지방공기업 대부분이 사업지역 및 분양 차질 등 대외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청도공영사업공사의 경우 소수용경(대회) 지연으로 필요인원은 20명이지만, 정원은 93명으로 조직돼 있고, 태백관광개발공사도 리조트 분양 차질로 현원 67명이지만, 정원은 203명으로 구성됐다. 평택도시공사 역시 정원 53명 → 현원 15명, 김포도시공사도 정원 50명 → 현원 22명, 의왕시설공단 정원 39명 → 현원 34명, 충북개발공사 정원 35명 → 현원 35명 등 대부분이 공통된 상황이다. 지속적인 조직편단을 통한 적정 정원 및 현원 관리 미흡으로 현원 대비 과다채정된 정원을 적용해 방만 경영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사장 위주의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광주도시공사, 울산시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인천관광공사, 부산시교통공단, 울산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전체 업무추진비 전체 집행액 가운데 사장 집행액이 100%에 달한다. 강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실, 방만 경영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고, 설립 심의 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 확대 및 주민 공청회 의무화를 통해 임원 임명 과정에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체적인 정기 조직편단 실시 의무화 등을 통해 부실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책조명

경북 구미, 상주, 김천 태양광 산업 중심지로 주목

경북 구미, 상주, 김천 등 경북 중서부지역이 우리나라 대표 태양광 산업'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태양광 소재·부품 생산에서 발전시설까지 잇따라 들어서면서 태양광 산업의 일관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장경태기자

구미, STX솔라(주) 고효율 태양전지 생산

경북도와 구미시는 지난달 2일 구미국가산업4단지에서 STX솔라(주) 태양전지(셀)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산업4단지 내 부지 5만 9000여㎡에 건립된 이 태양전지 공장은 1만 7000여가구가 사용 가능한 연간 50MW 용량의 단결정 태양전지를 생산한다. STX 솔라 측은 이번 공장 준공에 이어 2012년까지 모두 2000억원을 투자해 연간 생산능력을 300MW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단일 공장으로는 국내 최대 태양전지공장으로 키울 방침이다. STX 측은 2012년까지 총 2000억원을 투자해 연간 생산능력을 300MW까지 확장, 단일공장으로는 국내 최대 태양전지 공장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모듈 및 박막형 태양전지 생산 시설도 갖춘다. STX솔라는 태양전지 분야에서 세계 제일의 기술을 갖춘 일본 '샤프(Sharp)'사의 설비와 기술을 이전 받아 시험생산 1개월만인 8월부터 생산기반을 안정화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을 통해 국내외 태양광 모듈업체에 셀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날 준공식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태양광산업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향 지역에 투자를 진행해 준 강덕수 STX그룹 회장·구미 선산 출생에게 우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상주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태양광 핵심 소재 폴리실리콘이 생산된다.

웅진그룹 계열사인 웅진 폴리실리콘(주)이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상주 청리면 마곡리 청리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58만 5000㎡에 연간 5000t 규모의 폴리실리콘 생산 1·2 공장을 한창 건설 중이다. 여기에는 5500억원이 투입된다. 이 회사는 2012년까지 95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연간 1만 규모의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제3공장도 완공할 예정이다. 이들 공장이 모두 건립되면 폴리실리콘은 물론 잉곳과 웨이퍼·셀·모듈까지 일괄 생산시스템이 구축된다.

김천에선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삼성 에버랜드는 지난해 9월 김천시 어모면 옥계리 일대 부지 58만㎡에 순간 발전용량 18.4MW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 가동에 들어갔다. 이 곳에서 생산된 연간 2만 6000MW의 전력은 김천지역 8000여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김천에는 태양광발전 모듈공장 건립도 추진되고 있다. 김천시와 ㈜아이리솔라가 지난해 9월 김천에 태양광발전 모듈공장을 건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부지 물색 등 사업에 나섰다. 아이리솔라는 2단계 사업으로 김천에 풍력발전 부품 소재공장도 건립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경북 중서부지역에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관계로 다른 업체들의 공장 건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중서부지역, 솔라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고유가 등으로 태양광산업(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주에서 김천, 구미로 이어지는 경북 중서부지역은 솔라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다. 구미지역은 웨이퍼를 제조하는 'LG실트론', 태양전지 분야의 'STX솔라'와 'LG전자'가 활발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상주시는 태양광산업의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분야에는 '웅진폴리실리콘'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김천 지역에는 '삼성에버랜드'가 투자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18.4MW)이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폴리실리콘 제조에 필요한 산업용 가스를 생산하는 '영주 소디프신소재', 잉곳(ingot) 제조장비를 만드는 '영천 세미머티리얼즈' 등 태양광 연관산업이 발달한 경북도는 태양광산업의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



투자유치 포커스, 신재생에너지, LED, 디스플레이 등

경북도는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그린에너지 및 IT융·복합산업이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지정돼 관련 산업의 R&D, 산학협력, 인력양성 체계가 잘 구축돼 있다. 앞으로도 태양광·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디스플레이, LED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내의 기업 유치를 확대해 지역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민선4기 출범 이후 10조3000억원 이상의 기업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 4월 LG디스플레이(1조3600억원)의 대규모 증설 투자 준공 및 구미 STX솔라(2000억원) 준공에 이어, 경주건천 산업단지에 투자한 서한ENP(3200억원·시험가동 중), 영주 소디프신소재(2500억원 증설투자·12월 준공예정)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상주 청리산업단지의 웅진폴리실리콘(1조5000억원)과 구미국가단지의 엑스모빌(3억2500만달러), 코오롱(1500억원) 등 대규모 투자현장에서도 공장 건축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등 경북도의 기업유치 성과가 속속 결실을 맺으면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향후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경북도 성기룡 투자통상국장은 "경북지역은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그린에너지 및 IT융복합산업이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지정돼 관련 산업의 R&D, 산학협력, 인력양성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며 "앞으로 태양광·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디스플레이, LED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내의 기업 유치를 확대해 지역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스토리텔링 상품, 관광 문화를 이끈다.

우리 지역 이야기가 문화관광상품으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스토리텔링 열풍이다. 시간과 청각, 촉각 등이 총체적으로 만들어낸 경험이 문화 관광상품으로 개발되고 있다. 스토리텔링은 이제 지자체의 중요한 문화관광 콘텐츠로 재생산되고 있고, 지자체에게 깊은 메시지를 남기는 수단으로 바뀌고 있다. ·우성덕취재팀장

지자체, 감성을 이끌어 내는 '스토리텔링' 열풍

지자체들이 '스토리텔링 만들기'에 한창이다. 스토리텔링은 지자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감성이 담긴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 문화 관광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 중구는 대구 도심의 옛 골목을 스토리텔링으로 상품화한 골목투어가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좁은 도심의 구불구불한 골목길에 숨어 있는 역사의 현장을 둘러보며 문화해설사의 설명으로 대구 골목에 숨겨진 역사의 현장과 인물, 옛 정취 등을 느낄 수 있다. 지난 2003년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2만여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다녀갔다. 총 4개의 코스로 구성된 골목투어는 일제강점기 시대 고교생 800여명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도심으로 진출한 3,1운동길, 국제보상운동 창시자인 서상돈 고택, 민족시인 이상화 고택, 동학 창시자 최재우가 처형된 관덕정, 삼성그룹의 모체인 삼성상회 옛터 등을 만날 수 있다. 경북도는 선덕여왕, 대가야 정견모조, 연오랑 세오녀, 경주 최부자, 봉화 이몽룡 등을 대표적인 스토리텔링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선덕여왕'의 경우,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MBC 드라마 '선덕여왕'의 흔적을 따라가면서 관광객들이 천년고도 경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살아있는 선덕여왕을 만나다'라는 테마로 관련 유적지를 스토리텔링과 이벤트를 혼합한 관광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선덕여왕릉~진평왕릉~분황사~황룡사지~첨성대 등 선덕여왕과 관련된 유적지를 문화해설사와 함께 둘러본다. 선덕여왕 시절 만들었다는 동양 최고의 천문대인 첨성대의 과학적 비밀을 살펴보고, 선덕여왕이 태종무열왕 김춘추와 김유신 장군의 누이동생을 연결해줘 문무왕을 낳은 이야기,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문무왕의 화장터로 알려진 능지탑, 선덕여왕의 유언에 얽힌 설화 등을 듣는다. 경북 봉화는 고전 소설 '춘향전'의 주인공인 이몽룡이 봉화 출신 신비 성이성(1595~1664)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이몽룡 생가'에 대한 스토리텔링 상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대전시는 지난 35년간 대전시민의 애환과 추억이 담겨 있는 목척교 주변을 자연 친화적 명품 수변공간으로 조성하는 '목척교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기 위해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수집 중이다. 또 대덕구민들과 갈등을 빚은 바 있는 보물 제209호 동춘당 명품공원화 사업, 지역의 인기 명소인 한말수목원과 감천호수공원에 대한 스토리 발굴에 나서고 있다.

전주시는 대단위로 조성한 한옥마을의 홍보를 위해 마을 입구마다 지역에서 내려오는 전설을 토대로 거리에 이미지 조형물을 세울 예정이다. 마을 입구에 한옥의 역사와 우수성을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는 안내판도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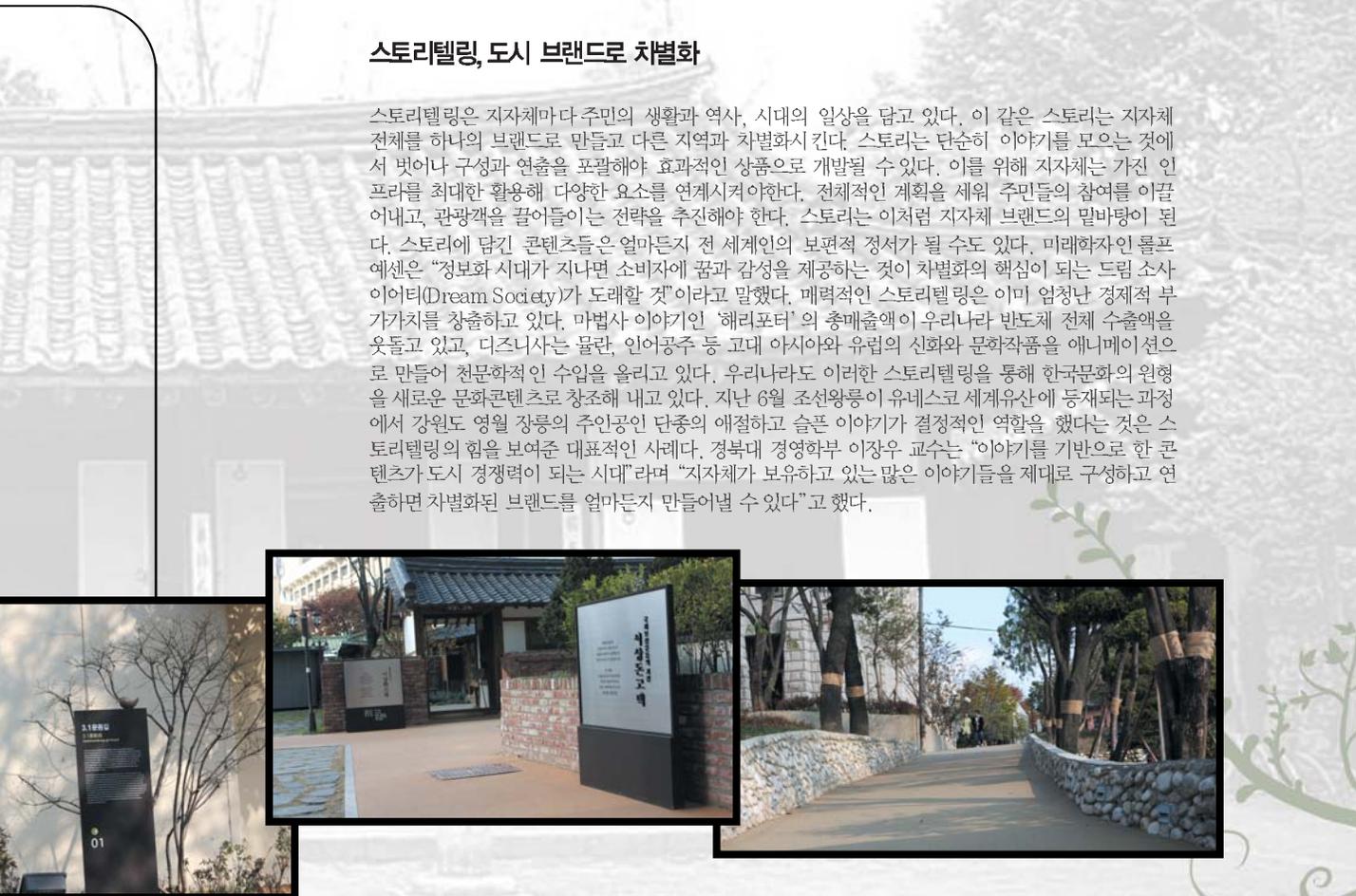


스토리텔링 역사적 사실 왜곡 않는 범위에서 개발 추진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담은 소재는 역사와 문화유산이다. 역사적 사실 그대로 스토리가 되고, 문화유산 전래가 이어져 온 것은 별도의 가공 없이도 훌륭한 관광상품이 된다. 관광스토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전파된다. 영화 나드라마, 소설 등 문화작품은 물론이고, 역사적 사실과 문화유산에서도 이야기의 명맥은 관광을 통해 유지된다. 영화나 드라마 등의 배경을 소재로한 지자체는 모래시계의 정동진, 영화 편지의 아침고요수목원, 겨울연가의 춘천, 반지의 제왕의 뉴질랜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제주올레는 '걷기'라는 근육운동에 '스토리'라는 감성을 입혀 성공했다. 역사적 인물을 배경으로 한 곳은 홍길동 도시를 만드는 장성, 장보고 역사공원을 만드는 완도, 춘향 마케팅으로 유명한 남원, 강원 '관동별곡 800리길' 등이 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이야기 개발 저변이 확대되자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재청은 '문화유산과 관광이 만나는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을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전남 여주시 일원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이순신과 거북선 이야기'를 주제로 여주시 일대의 관광자원과 역사적 배경을 결합시킨 행사로 '문화유산 디지털 스토리텔링 공모전'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전시회' '문화유산을 재조명하는 스토리텔링 교육' 등이 펼쳐져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토리를 개발하고 스토리 개발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스토리텔링, 도시 브랜드로 차별화

스토리텔링은 지자체마다 주민의 생활과 역사, 시대의 일상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스토리는 지자체 전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시킨다. 스토리는 단순히 이야기를 모으는 것에서 벗어나 구성과 연출을 포괄해야 효과적인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가진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요소를 연계시켜야 한다.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스토리는 이처럼 지자체 브랜드의 밑바탕이 된다. 스토리에 담긴 콘텐츠들은 얼마든지 전 세계인의 보편적 정서가 될 수도 있다. 미래학자인 토폴예센은 "정보화 시대가 지나면 소비자에 꿈과 감성을 제공하는 것이 차별화의 핵심이 되는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은 이미 엄청난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마법사 이야기인 '해리포터'의 총매출액이 우리나라 반도체 전체 수출액을 웃돌고 있고, 디즈니사는 물론, 인어공주 등 고대 아시아와 유럽의 신화와 문화작품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천문화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한국문화의 원형을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창조해 내고 있다. 지난 6월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과정에서 강원도 영월 장릉의 주인공인 단종의 애절하고 슬픈 이야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스토리텔링의 힘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경북대 경영학부 이장우 교수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도시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제대로 구성하고 연출하면 차별화된 브랜드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대구 달서구의의회 구성자 의원 대구경북지역 광역,기초의원 최초 '국회의장상' 수상

구성자 의원(40)은 호기심이 많다. 모르는 게 있으면 알아야 되고, 반 전문가는 돼야 한다. 자신에게 일을 맡겨 준 주민들을 위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끊임없이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려면 스스로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구 의원은 "주민 한 사람을 대하더라도 진심으로 다가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다"며 "진심으로 주민들 깊숙이 다가가기 위해 항상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_ 우성택취재팀장

대구경북지역 광역, 기초의원 최초 '국회의장상' 수상

구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국회사무처가 주관한 제5차 모범사례 발표에서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대구경북지역 광역, 기초의원 가운데서는 처음이다. 구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모인 4천여명의 지방의원들 앞에서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던 조손가정을 지원하는 조례제정과 구체적인 활동 사항등을 발표해 갈채를 받았다. 그는 "제가 대중들 앞에서 발표를 능숙하게 못하지만, 발표를 못하면 오히려 저를 지지해 준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겨 용기가 더 났다"며 "제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저를 지지해 준 주민들의 관심과 희생이 보태줘서 받은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구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조손가정지원조례는 부모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만 같이 사는 조손가정 86세대, 손자녀 150여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구경북지역 최초로 제정돼 조손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조손가정들은 교육 혜택은 물론 열악한 경제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모두 힘겹게 살고 있다"며 "지금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조손가정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베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손가정, 사회적 관심 이끌어

지난 2006년, 30대 중반 여성의 나이로 초선 의원이 된 구 의원은 지역 새마을 부녀회장을 하면서 많은 봉사활동을 경험했다. 주민들 속에 함께 지내다보니 당연히 들리는 목소리도 많았다. 그는 이렇게 우연히 자신의 지역구인 신당동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를 돌아보다 조손가정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심각성을 느끼게 됐다. 구 의원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조손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접하고는 '정말 소홀하고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며 "그 이후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통계 자료가 없다 보니 조손가정은 몇 가구나 있는지, 그들의 생활 환경 등에 관해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 우선 실태 파악이 필요했던 구 의원은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집행부의 도움을 받아 관내 조손가정에 대한 생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를 통해 조금씩 조손가정에 대한 문제점과 사회적 관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구 의원은 "조손가정의 실태 조사를 하면서 대다수 조손가정들이 세대차로 인한 갈등과 경제적 문제, 교육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었다"며 "특히,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였지만, 교육받을 여건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다.

예산 부족, 다양한 지원책 마련

지자체가 직접 나서 복지 예산을 마련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27%에 불과한 달서구의 재정자립도로는 기초생활비 지급도 빠듯했다. 그는 재정 마련이 힘들다면,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5만여명에 달하는 대구지역 최대 '자원봉사자'와 6개 대학이 밀집한 '대학생 멘토링 봉사'를 떠올렸다. 지난해부터 지역 여성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빅마마 봉사단'을 구성, 조부모 상담 및 아이들 상담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고,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계명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조손가정을 방문, 개인 과외를 비롯해 형제자매 역할을 해주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이들 자녀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관내 학원과 연계해 무료 수강을 지원하고, 10개의 문화 공연장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조손가정 12가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지면 직접 지난 1여년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구 의원은 "이들을 초청해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가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며 모두 눈물을 쏟았다"며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보람도 많이 느꼈었다"고 말했다.



주민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입법 활동 계속할 것

'조손가정'에 이어 나온 그의 두 번째 작품은 '아동여성 성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다. 구 의원은 지난해 달서구 관내에서 발생해 전국적이 사회 문제로 부각된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그는 "이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고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했었다"며 "고민 끝에 그 해답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부모들의 올바른 성교육에 있다"고 전했다. 자식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 지도법이 아동과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본질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부모들은 그 방법론에 대한 성지식이 없었다. 구 의원 자신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올바른 성교육 지도법을 알지 못했다. 이 때문에 그는 성교육 강사 과정을 직접 이수해 성교육 지식을 쌓고 의정 활동에 나섰다. 이를 계기로 구 의원은 '아동여성 성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간 초등학교 30곳, 중학교 20곳을 돌며 학부모들을 위한 성교육 강좌를 개설했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는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시키기 위한 관심은 많았지만,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성교육 강의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은 폭발이었다"고 말했다. 내년 3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과정에서는 성교육 교재도 제작, 배포하고, 대상 학교와 학부모 수도 더욱 늘릴 예정이다. 구 의원은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입법 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나에게 기회를 준 만큼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돐 구장 건설 약일까?독일까?

야구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돐구장 건설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 야구에서 금메달 그리고 올 3월 2009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준우승의 쾌거를 이루면서 국내 프로야구도 관중 500만 돌파라는 최고의 흥행을 거뒀다. 고척동 돐구장 기공식을 시작으로 야구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돐구장 건설이 첫발을 내디뎠다. 안산시 역시 오는 12월중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7월에 착공, 2012년에 완공을 목표로 '돐구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29일, 대구시와 광주시는 포스코 건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돐구장 건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 대구시, 광주시 돐구장 건설 포스코 MOU 체결



서울 고척동, 경기 안산시의 돐구장 건설에 이어 대구와 광주시까지 돐구장 건립에 나서자 야구인들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보다는 의심과 염려가 먼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대구시와 광주의 돐구장 건설에 대해서는 이런 우려가 더 깊다. 돐구장 건립은 1948년과 1965년에 완공된 대구구장과 광주구장을 대체하기 위해 2013년 까지 2만5000~3만석 규모로 만들어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각종 이벤트가 열리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내용은 포스코 건설이 2개월 내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시에 제안하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기본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방식으로 포스코는 건립비용만 300억~400억원 가량을 투입해 돐구장을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한다. 이에 제공 받은 부지에 돐구장과 더불어 스포츠타운, 주택개발 등을 통해서 수익을 맞춘다는 계산이다. 시에서는 부지제공 및 각종 인허가 행정지원의 편의를 도와주면서 구장 주변 지역을 동시에 개발해 수익금으로 구장을 건립하는 '기업제안형' 사업을 채택하면서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게 된다. 광주시도 내년 3월까지 도시계획 검토와 사업타당성 조사를 벌인 뒤 2011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돐구장이 들어설 지역에 최소 1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하기로 하고 현재 대상부지 2곳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취약기반에서 수익 가능할까?

대구와 광주에서 검토 중인 돐구장의 경우 구장 건립에만 각각 약 4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부대시설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한다면 8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8000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기 위해선 그 몇 배의 수익이 창출돼야 하지만 수익성에 대해선 아직까진 의문이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의 인구 밀집도를 자랑하는 서울에 돐구장을 건립한다 해도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50만 인구의 광주와 250만의 대구에서 그것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돐구장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야구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경우 8개 구단이, 일본은 6개 구단이 돐구장을 사용 중에 있지만 이들 중에서 야구 경기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도쿄돐을 제외하곤 나머지 5개의 돐구장은 수익 창출이 비찬 상황이다. 이승엽 선수가 소속된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홈구장인 도쿄돐은 야구 경기뿐만 아니라 콘서트를 비롯해 각종 이벤트를 거의 연중무휴 개최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호텔, 쇼핑몰, 놀이공원 등의 부대시설로 연간 방문객이 3800만명에 이르고 있다. 미 메이저리그의 구단 역시 구장에 테마타운 등의 부대시설을 통해 다목적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와 광주시와 과연 구장과 부대시설을 활용해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문제다.

3 구장 시설유지 및 관리비용도 부담

돔구장 건립과 부대시설의 운용만이 문제가 아니다. 한해 약 100억원으로 추정되는 구장 시설유지 및 관리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2002년 월드컵 당시 각 지자체에선 장밋빛 계획들을 세우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최신 설비의 경기장을 건설했다. 하지만 지역경제의 발전과 성장이라는 목표는 사라진지 오래고, 현재는 운영비용마저 감당하지 못하며 가뜰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애물단지 신세가 돼버렸다. 현재 우리나라 프로야구단의 경우, 수익원 중 모기업의 지원이 절반 이상을 넘고 구장운영으로 나오는 수익이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에서 돔구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지금도 국내 프로구단 대부분이 한 해 수백억원의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한신 타이거즈 야구단도 구장 임대료를 이유로 지역 내에 위치한 교세라돔을 이용하고 있다.



돔시티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구 수성구 삼덕동 일대. 이곳엔 현재 대구시립미술관(가운데)건립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제공 대구시

4 선거 앞둔 선심 공약?

한 현직 프로야구 선수는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구장을 짓겠다고 외치지만 공허한 메아리처럼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며 “돔구장이 아닌 야구장을 지었다라면 3~4개는 지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광주와 대구는 돔구장 건설에 대해 너무 많은 ‘공수료’를 납발한 대표적인 지자체로 손꼽히고 있다.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의 열기를 등에 업고 많은 정치인들이 돔구장 건설 계획을 터뜨렸다가 흐지부지 무마시키는 일을 반복하기도 했다. 2002년에 삼성라이온즈가 우승하자 대구시는 돔구장 건설을 약속했었고 광주시의 경우 박광태 현 광주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또한 선거철만 되면 많은 정치인들은 그 필요성을 제기하며 단골메뉴인 ‘돔구장 카드’를 꺼내들고 나왔지만 지켜진 적은 없었다. 많은 시민들과 야구인들은 입을 모아 돔구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12년 만에 기아타이거즈가 우승하며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슬그머니 돔구장 건설을 꺼내 놓으며,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대구는 또 현 돔구장 건립 예정지에 대한 개발을 두고 ‘포스코 건설’에 대한 특혜의혹까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구시와 광주 모두 4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막대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구체적 조사나 공청회는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채 민간업체의 사업계획서만 보고 결정한 것을 두고도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일본의 도쿄돔이나 나고야돔의 경우 20년의 논의기간을 거쳤고 히로시마에 새 구장을 지을 때엔 시와 시민단체, 구단, 지역 상인들이 오랜 토론 끝에 구장을 짓는 방법과 방향을 결정한 점은 이와 대조적이다. 우리의 경우엔 시민들이 이용하는 구장과 부대시설임에도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구와 광주의 시민뿐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돔구장의 현실성과 필요성에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뒷받침이 안 된다면 돔구장은 또다시 ‘전시행정’, ‘선심 공약’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

테마산책

_ 장경태기자

쓰레기는 이제 “돈”이다!

온갖 폐기물이 돈으로 바뀌고 있다. 전국 지자체마다 폐기물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확보해 활용하면서 하나의 '에너지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으로 적게는 연간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이를 활용해 '세수 확보'는 물론 '에너지 산업', 나아가 '녹색관광 상품'으로까지 연계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장이 이제는 '종합 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거듭나는 셈이다.

'지자체마다폐기물'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 수익 창출

인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으로 변신

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단일 매립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1992년부터 매립을 시작해 하루 평균 1만8000t의 쓰레기를 처리 중이다. 수도권 매립지 내에는 제1, 2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가동되는 50MW급 매립가스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이 발전소는 연간 170억원가량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곳을 2017년까지 1조6713억원을 투자해 폐자원 에너지타운과 환경·문화단지 등을 갖춘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을 만들 계획이다. 가깝게는 오는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와 경인 아라뱃길 등 주변 지역 개발 계획과 함께 수도권 매립지의 환경자원을 연계해 개발할 방침이다. 또, 골프장, 승마장, 호수 등이 잘 이루어진 환경관광단지내 매립지로 전환시켜 향후 국가적 볼거리와 자랑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지역 소각장, 전기·증기 생산에 수익 창출

부산지 강서구 명지소각장은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증기를 주변 녹산국가산업단지의 기업체에 판매하거나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해 여기서 나온 전기를 판매해 돈을 벌고 있다. 일부 증기와 폐열은 무료로 나눠 주기도 한다. 이곳은 2007년부터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나오는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에 팔아 연간 13억원을 벌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증기를 녹산공단의 2개 기업체에 팔아 20억원을 벌었다. 증기를 구입한 기업체는 액화천연가스(LNG) 대신 증기를 사용해 연간 10억원의 연료비를 아끼는 성과도 얻었다. 해운대 소각장은 인근 해운대 신시가지 내 3만7000여 가구에 난방과 온수를 무상 공급하고 있다. 이는 지역난방공사의 연간 열 소요량의 36%에 해당하는 11만2000Gcal로 가격으로는 70억원어치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추가로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이다. 2012년 준공할 예정인 이 발전소는 국·시비 2146억원을 들여 부산 생곡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60만kW 용량의 발전소를 세운다. 이 시설이 가동되면 하루 900t의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립장 사용연한이 11년 늘어난다. 또 발전소가 생산하는 60만kW의 전기를 2만5000가구에 판매하면 연간 171억원을 벌 수 있다. 원유 수입 대체 효과도 연간 34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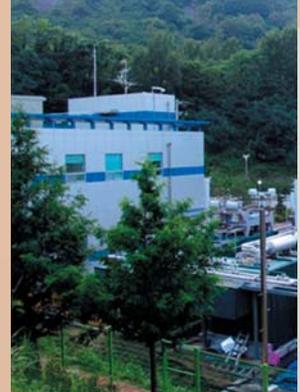
울산 생활폐기물소각장, 이산화탄소(CO₂) 감축분 판매에 수익

울산시는 이산화탄소(CO₂) 감축분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시는 남구 성암생활폐기물 소각장 폐열로 스팀을 생산해 작년 7월부터 인근 (주)효성 용연공장에 대체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최근 국내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으로 발생하는 연간 4만5464t의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정부에 판매해 올해 말에는 2억2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2006년 7월에 성암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를 인근 (주)금호석유화학에 대체연료로 판매하는 것을 국내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등록하고 작년 CO₂ 감축분(3만9257t)에 대해 1억 8988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시는 또 스웨덴 투자사(주)SBK가 남구 용연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에서 고순도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8월부터 인근 SK케미칼(주)에 공급하면서 연간 1만1천500t의 CO₂를 감축해 1억여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유성의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스팀을 생산해 인근 (주)한국제지에 판매하는 사업도 국내 온실가스감축사업에 등록해 수익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 쓰레기 매립장, 탄소배출권 제공 외화 수익 기대

대구시 쓰레기 매립장은 이곳에서 배출되는 매립가스를 이용, 신재생에너지로 자원화되는 과정에서 탄소배출권을 제공해 외화 수익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5일 대구시는 방천리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이 UN의 심사를 거쳐 지난 2일 UN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에 22만5919t(CO₂ 환산량)의 탄소배출권(CERs)의 발행이 공시 됐다. 지자체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 이로써 대구는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이 유엔의 검증을 통과, 탄소배출권을 승인받게 됐다. 이번에 발행된 탄소배출권 판매 시, 현재 톤당 판매단가가 13유로 정도인 걸 감안하면 약 3백만 유로(약 50억원)의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는 방천리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자원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269억원을 투자, 매립가스 포집·정제시설 130m³/분과 전기발전시설 1.5mw 규모의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을 2006년 9월에 설치 완료, 2006년 10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현재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은 연간 5000만m³ 정도의 매립가스를 포집 정제해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다. 정제된 가스 대부분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에 보일러 연료로 판매하고, 일부는 전기를 생산해 자체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UN에 등록된 CDM사업은 총 1879건, 우리나라는 34건이 등록됐다. 지자체로는 대구시가 유일하다. 우리나라에서 폐기물분야 탄소배출권을 대구시가 처음으로 발행받게 된 것이다. 시는 내년 초 UN에 탄소배출권(CERs) 발행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매년 30~40만t 정도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돼 시 재정수입에도 기여하게 됐다.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사업이란?
UN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채택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얻게 된 감축실적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개발도상국이 독자적으로 달성한 감축실적을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지정돼 있어 선진국에 감축분을 판매할 수가 없다.

국가자산회계에 시가평가제 도입

앞으로는 국가자산을 회계 처리할 때 취득원가 외에 일정기간마다 시가를 반영한 공정가액으로도 재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2011년부터는 유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처리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제6차 '국가회계제도심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국가회계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시가평가 제도를 도입해 종전의 취득원가 평가원칙에 추가해 일정기간마다 공정가액 등으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평가연도나 평가방법 및 요건 등의 세부사항은 재정부 장관이 별도로 규정토록 했다. 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가 보유한 유형 자산에 대해선 내후년부터 감가상각 회계처리를 적용토록 하고, 이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이미 도입한 기금이나 기업특별회계의 유형 자산에 대해선 정액법, 정률법 등을 적용해 현행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회계처리를 하도록 했다.

'기업특별회계'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양곡관리, 조달, 우체국예금, 우편사업 등의 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회계를 말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선 국유재산과 물품, 채권 등 개별법상의 국가자산에 대한 가격평가 및 회계처리방법 등이 국가회계기준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등 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한 개별법상의 지침 마련 근거도 규정했다. 이외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長)과 기금관리주체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회계업무를 위해 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회계처리 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게 했고, 각 중앙관서 및 소관 회계·기금의 업무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공무원, 정부정책 반대하는 행위 금지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못하게 된다. 또 근무시간에 정치적 주장이 담긴 복장을 착용해서도 안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집단이나 연명 또는 단체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도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나 머리띠, 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는 공무원노조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가 빈발함에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다만 지난 10월 21일 마련한 입법예고안에서 공무원 개인도 정부정책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집단적인 반대행위만 금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근무 기강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체육시설 설치주체 관련 법령해설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닌
일반 국민도 설치할 수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제3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경기도 화성시가 요청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승마장)의 설치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실외체육시설인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만 제한되는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왔다. 이는 현행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설치되는 실외체육시설의 범위가 계속 확대 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생활 체육시설의 개념만을 인용하는 것이지 해당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주체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조합설립 인가신청시 토지소유자 동의 관련 법령해설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면
인가 신청 당시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새로 받아야"**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인가가 신청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경기도 평택시가 요청한 "도시개발법" 관련 법령해석 인건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한 이후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인가가 신청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조합설립 인가신청 당시 새로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에서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동의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설립 인가 신청시의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법제처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사표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 당시 미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조합설립 인가신청 당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에서는 조합 설립과 관련해 자격 없는 자의 동의가 되므로, 이를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유효한 동의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화예술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횡령, 문화체육관광부 제도 개선책 마련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받는 문화예술, 시민단체들이 수백 억원대의 보조금을 부당집행하거나 빼돌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006~2008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3개 부처로부터 연간 8,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543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전체 보조금 4,637억원 중 500억원 가량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특히 16개 민간단체의 임직원 21명에 대해선 21억 2,469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여기에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민예총) 등 예술가협회 3개, 시민운동단체 2개, 영리법인 5개, 공연단체 2개, 기타 문화예술단체 4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대상 가운데서는 진보 성향의 단체는 물론 보수성향의 단체까지 총 망라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은 다양한 수법으로 이뤄졌다. 허위로 용역 계약을 맺고 돈을 지급한 뒤 바로 돌려받는 수법도 있고, 은행 계좌이체 증서의 날짜를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도 나왔다. 세금계산서를 허위 또는 중복 제출하는 고전적인 방식 역시 여전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A예술단체의 팀장 김모씨는 2006, 2007년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받은 보조금 19억2,000만원 중 4억9,29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보조금 지출 증빙으로 이미 사용된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증을 다시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

문체부 산하 A단체의 간부 김모씨 등 3명도 보조금 11억2,000만원 중 2억8,241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고 보조금 예금 계좌에서 2억여원을 자신들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뺑뺑함을 보였다. B단체 간부 최모씨는 허위로 용역계약을 맺고 일정금액을 거래처에 송금한 뒤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 2억866만원을 횡령했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거래처 관계자 2명으로부터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빌리는 등 '전자서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C단체의 간부 강모씨는 다른 보조금 사업에 집행된 증빙자료를 중복 제출하는 수법으로 5억여원을 횡령했고, D단체의 간부 김모씨는 해당단체의 이름으로 보조금을 착복한 것은 물론 단체부설연구소를 사칭한 개인연구소를 통해서도 보조금을 이중으로 빼돌렸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
계약리뷰
-이준혁기자

문화관광부, 보조금 제도 개선책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횡령 등 여러 문제가 확인된 문화예술 단체의 보조금에 대해 제도 개선책을 강구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우선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모두 카드 결제 방식으로 집행하게 해 민간단체들의 집행 내역을 온라인을 통해 수시로 관리, 감독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크고 작은 문화예술단체들이 대부분 회비로 운영비조차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특정한 사업비로 주는 보조금의 극히 일부는 운영비로 할당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부처간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작용 막을 대책 세워야

정부는 지난달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를 열고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대비 4% 줄이기로 최종 확정했다. 2020년 국내에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 가스 배출량의 30%를 감축하는 수준이다. 이를 두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기업들은 4% 감축안이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반응을 나타냈지만, 이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해 감축폭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4% 감축안은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요구하는 최대치다.

산업계와 시민사회단체 엇갈린 반응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화두로 온실가스 저감의 중요성을 외쳐왔지만,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은 서로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못해 왔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것이 단순한 환경만의 문제가 아닌 경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도 이런 이유로 쉽지가 않았다. 이번 감축목표에 대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더 큰 국가 이익을 고려해 목표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엇갈린 반응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산업계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4% 저감목표를 달성하기가 힘들며, 온실가스 감축으로 산업부문의 부가가치가 줄어들면 실제 국내총생산(GDP) 손실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4%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자, 세계 15번째 GDP 규모를 갖고 있고, 세계 9번째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보다 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 줄이고 목표 달성에 주력해야

이미 이러한 국내 사정과 달리 세계적으로는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0년 배출량을 2005년 기준으로 13%, 미국은 20%, 그리고 일본은 30% 감축 목표를 정해놓고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선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탄소 관세' 조항을 신설, 양국간 교역 논리로 풀어가고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전개되는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두고 우리도 국가 감축목표가 설정된 이상 대립은 지양하고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뒀다. 새로운 저탄소 시대를 맞아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리더역할을 하고, 함께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산업계는 화석에너지 사용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새로운 탄소 시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온실가스 감축 자체가 이제는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단체 또한 우리나라 에너지 자급률이 3%임을 상기하며 에너지 절약을 전 국민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강한 리더십과 함께 국민과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소통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은 산업계와 국민에게 고통분담, 비용분담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진솔한 자세로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를 나눠야 한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 똘똘하다면 저탄소 시대를 맞아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생활경제 _ 이준혁기자

겨울철, 알뜰 살림 중고장터에서



대구 중구 아나바다장터

대구 중구 남산종합사회복지관과 중구청이 남산동 까치아파트 상가 내에 개장한 상설매장이다.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복지관 후원자와 주민들이 기증한 옷, 주방용품, 신발, 액세서리 등이 다양하게 구비돼 있다. 대부분의 물품은 1~3천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간혹 들어오는 새 옷, 새 신발의 경우 5천원 미만원정다. 수익금도 '사랑나눔푸드마켓' 물품 구입과 무료급식 등에 사용된다. '사랑나눔푸드마켓'은 중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400여명이 월 2만원까지 공짜로 식품을 가져갈 수 있는 식료품매장이다. Tel. 254-2562.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 가게는 시민들이 기증한 헌 물건을 팔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대구에는 수성점(대구은행 본점 맞은편 동아마트 안), 칠곡점(칠곡홈플러스 뒷편 삼상디지털프라자 1층), 월성점(월성3주공아파트 상가), 남산점(대명시장 맞은편) 등 4개가 운영 중이다. 수성점(구 반월당 동아점)은 2004년 시작으로 대구에 첫 선을 보였고, 매년 수익나눔액이 수억원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가게에서 판매하는 물건 평균 단가가 2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수 만명의 시민들이 다녀간 셈이다. 그동안 대구시민들이 기증한 물품은 판매 물량도 100만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아름다운 가게는 대구시민들의 기부문화와 소비행태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Tel. 792-1403 (아름다운가게 대구경북본부)





행복한 나눔가게

보건복지부 산하 시니어클럽에서는 '행복한 나눔가게'를 운영 중이다. 대구에는 수성시니어클럽(784-6080)이 운영하는 수성점(노변초교 앞)과 남구시니어클럽(471-8090)이 운영하는 이천점(대구은행 대봉지점 뒤), 성당점(성당시장-문성병원 사이) 등 3개 매장이 있다. 생활용품에서부터 가전제품, '의류, 가구 등 집에서 쓰지 않는 재활용품을 모아 노인들이 수리, 수선했다 판매하고 있다. 수성점에는 수거한 용품을 분리하는 분류매장과 가거에 24명 이전 '성당점'에는 16명의 노인들이 고용돼 노인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천점과 성당점의 경우 판매수익금으로 인건비 등 가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모두 조달하고 있다. 이처럼 '행복한 나눔가게'는 노인일자리를 창출 뿐 아니라 자원재활용 향상 시민들에게 저렴한 물품을 공급하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칠성시장 전자주방상가

칠성시장 전자주방상가는 대구를 대표하는 중고거리다. 신천 고가도로변에 중고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가들이 늘어지면서 100여개 상가가 밀집돼 있다. 거라에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판매 및 수리, 각종 중고전자 교환 판매 등의 간판들이 눈에 띈다. 온갖 가전제품 뿐 아니라 그릇 주방용품, 연탄난로 등 다양한 물품도 판매되고 있다. 지난 겨울에는 경기불황으로 연탄난로를 구입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중고를 새 것처럼 고치기 위한 상인들의 손길도 분주하다. 상점마다 입구에는 수리를 마친 가전 제품들이 비닐로 포장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가격은 물품 상태, 크기 등으로 결정된다. 42인치 벽걸이TV는 70만원, 보통 500 리터 소형 냉장고의 경우 4~5만원 연탄난로는 15~40만원 선까지 다양하다. 중고가 아닌 새 제품도 구입할 수 있다. 새 것은 시세보다도 평균 30% 정도 싸다.



수성구 은혜나눔 수요장터

수성구 지산종합사회복지관이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산5단지 아파트 상가 지하에서 열린다. 옷, 가전제품, 주방용품, 생필품 등 주민들이 기증한 중고 물품이 판매된다. 3년 넘게 장터가 운영되면서 입소문이 퍼져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의 발길도 잦다. 가격은 몇 백원에서 몇 천원까지 천차만별이지만, 대개 1천원을 넘지 않는다. 2천원 이상이면 고가에 속한다. 수익금은 지산2동, 상동, 두산동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차상위계층 난병비 지원을 비롯해 주거환경 개보수 등에 사용된다. Tel) 781-5156



달서구 상인 나눔마트

'늘품마트'는 달서구 상인동 비둘기아파트 1단지에 자리잡고 있다. 상인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2006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개장했다. 이곳은 돈을 주고 물건을 매매하는 곳이 아니다. 단지 물건을 내놓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는 일종의 물물교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곳을 이용하는 회원은 850여명으로 아파트 거주자부터 자원봉사자, 인근 주민들까지 다양하다. 회원에게는 통장을 만들어준다. 물품을 기탁하면 적정 가격을 매겨 '품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바지 한 벌을 가져가면 보통 300품 정도 적립 받는다. 품을 이용해 의류, 식료품, 생필품 등 다양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Tel) 641-1100



Policy

지자체는 지금

— 우성덕 취재팀장



지자체, 제4의 경마장 유치 경쟁 치열

최소2천억원이 넘는 지방세 확보가 가능한 경마장 유치를 위해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마사회는 지난10월 27일 과천, 제주, 부산에 이은 제4경마장 후보지 선정과 관련, 공모설명회를 개최하고, 경마장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이날 공모에서는 대구, 경북, 인천, 전남, 전북, 강원 등 6개 지자체에서 4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신규 경마장은 대단위 부지에 경마장과 테마공원, 휴식 및 워락공간 등을 건립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경마장 건설에만 2500억원의 건설비가 투입된다. 마사회는 설명회에서 부지규모는 최소 100만㎡ 이상 150만㎡(45만여평)이하로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연간 매출, 관람객 목표 등은 정하지 않았다. 또 교통접근성, 사행산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해결할 방안과 도와 시군구간 지방세 배분배출 등의 조건도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는 이달 말까지 제안서를 접수 받아 연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계획 승인(정부) 및 인허가(2010년), 설계 및 착공(2011년), 공사(2011~2013년), 개장(2014년)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후보지 선정은 관려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단과 19명으로 구성된 설치심의위원회가 부지적합성, 입지여건, 사업추진효율성, 공공성을 평가해 이뤄진다.

마사회 광역지자체별 후보지 2곳 제한해 최종 선정

한국마사회는 광역지자체별 후보지를 최대 2곳으로 제한했다. 경쟁 지자체 가운데서도 말 산업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경북도와 전북도가 가장 강력한 유력지로 꼽히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말 산업이 발달한 경북도와 전북도가 가장 강력한 유력지로 꼽히고 있다. 영천시는 도립동, 금호, 대창, 화산 등지를 대상으로 경마장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 부지 예상 규모는 165만2천900㎡(50만평)으로 무상임대 형태의 부지 제공을 검토 중이다. 상주시는 사벌면 삼덕리 일대 132만㎡ 부지를 확보했고, 경마장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연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봉화군은 봉성면 외삼리 100만㎡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전북도 후보지는 정읍시와 장수군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와 전주 중간 지점에 위치한 정읍시는 지리적 이점이 크고, 경주마 목장을 갖춘 장수군은 말 산업 인프라가 풍부한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경마장, 막대한 지방세 수익 지역경제 효과 노릇 톡톡

경마장 유치가 지자체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재정에 막대한 기여를 하는 데다,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크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경마공원은 개장 이후 4년간 지방세 납부금액이 6천 833억원에 이르고, 특히 지난해 부산시와 경남도에 납부한 지방세는 2천 306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부산시 세수의 5.1%, 경남도 세수의 7.7%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경제의 엄청난 효과 노릇하고 있다. 과천시의 경우 지방세 중 교육세 확충으로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무상지원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역시 지방세 8600억원, 제주도 600억원의 지방세를 거두들였다. 경마공원이 조성될 경우 연인원 15만여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1100여명의 운영 인력 채용 등 부가치 효과도 만만찮다.



지자체 탄소거래소 유치전 치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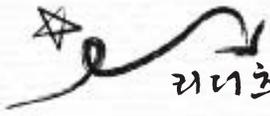
전국 지자체가 2011년 설립 예정인 탄소배출거래소 유치를 놓고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탄소배출거래소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나 국가 간 배출 권한 거래를 허용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석처럼 매매하는 곳으로 녹색 성장시대의 주요한 수입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나주시에 조성되고 있는 빛가람도시(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에 탄소거래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외국의 경우처럼 전력거래소가 탄소배출권 거래까지 맡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나주에 입주하게 될 한국전력거래소에 탄소거래소가 유치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해 9월 한국전력거래소와 탄소거래소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미 공조체제에 들어갔다. 또 지역 상공회의소와 광역의회 차원에서 유치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의 탄소거래소 유치를 위한 행보도 발빠르다. 특히 부산은 거래시스템 노하우와 세계적인 인프라를 보유한 부산 소재 한국거래소(KRX) 내에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이 동북아 탄소배출권 시장을 선점하는 데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부산시는 또 부산상공회의소, 한국거래소,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 대표 26명으로 구성된 '탄소배출권거래소 부산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서울, 대구, 포항 등지도 유치전에 가세할 것으로 알려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거래소 유치와 관련 현재 최대 쟁점은 정부가 용역 중에 있는 담당 부처의 선정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한국전력거래소 등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부산의 경우 한국거래소와 연계된 금융위원회의 선정이 서로에게 좀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3부처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른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제기 되는 등 아직까지 혼전 양상이다.

탄소배출거래소 엄청난 파생금융상품으로 떠올라

탄소배출권거래소는 세계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매년 각국 및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 남은 양에 대한 권리를 사고파는 시장이다. 시장규모가 2010년에는 150조원, 2020년에는 1500조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성장속도가 엄청난 파생금융상품으로 불리고 있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거래 규모는 2006년 300억달러에서 내년에는 1500억달러까지 급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토의정서에 기인한 국가 중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고 있는 36개국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에 비해 5.2% 줄여야 하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도 지난해 17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도 배출전망과 비교해 30%를 감축하기로 결정하면서 세계 배출권 보유량 1위인 중국은 국제연합(UN)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하기로 하는 등 배출권거래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도 그동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여오고 있고, 지난해 17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2005년 대비 4%감축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업들의 탄소배출에 대한 관심도 한껏 고조됐다. 이로 인해 정부는 탄소거래소 설립을 계기로 오는 2013년까지 아시아 지역 최대의 탄소금융 시장과 녹색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리더혹천리레미

'사람 살만한 사회를 위하여' 간디문화센터 문창식 대표



▶ 문 창 식
간디문화센터대표

문창식 대표는 현재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서경리에 소재하는 간디문화센터 대표를 맡고 있다. 전부터 그를 아는 사람은 환경운동가 문창식으로 기억 할 것이다. 오랜 세월 지역의 바람직한 환경을 위해 청춘을 바쳐 왔었다는 데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을 것이다. 때론 투쟁적으로 비취졌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정당한 논리와 설득력 있는 화법으로 상대를 감복시키며 환경의 전도사로 살아 왔다. 그랬던 그가 불혹을 넘긴 몇 해 뒤부터 지역의 새로운 문화 전도사로 거듭 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문화라 하면 우린 쉽게 공연 문화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문 대표가 추구하는 문화는 기존의 공연 문화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사람이 그 중심을 두고 있다.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그런 사람들이 넘쳐 나는 세상을 꿈 꾸며 같이 만들어 보고자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나 아니면 다들 경쟁해야 할 적으로 치부하며 살아가고 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부족해도 받아들여 지고, 모자라도 통용되는 그런 사람냄새 나는 사회적 문화를 형성해 보고자 스스로 실천하며, 그런 문화를 전염시키고자 부단히 애쓰는 조금은 지루한 삶을 선택 한 것이다.

삶의 근거는 지방에 있으나 주소는 도시에 두고, 얼마인지는 모를 도시의 프리미엄을 포기 못 해 안달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사람이다. 간디문화센터는 경북 군위군 소보면 서경리 촌구석에 있다. 고민 할 것도 없이 주소를 옮겼다. 이제는 소보면민이 되어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실천적 삶을 살고 있다. 그 지역엔 다문화가족이 많이 산다. 그들의 애환을 진정으로 같이 고민하고 그네들이 진정으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한다. 조금은 지칠만하고 조금은 힘들만 하지만 그럼 어떡냐? 그가 그곳에 자리함에 얼마나 많은 이가 미터워 하나! 그는 힘들을 즐긴다. 그로 인해 위로 받는 그들을 위해 기꺼이 그곳에 자리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문창식 대표이다.

나이 들어 필요 한 게 무엇이 있을까? 돈, 명예, 사람마다 바라는 바가 다 다르리라, 하나 따스한 가슴을 가진 인간미 넘치는 그런 친구가 가장 필요 하지 않을까. 나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늘 친구 같은 문 대표를 추천하며 상상해 본다. 그의 꿈이 우리 지역 사회에 널리 씨 뿌려져 참 사람다운 문화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따뜻한 사회를..이 겨울의 초입에 꿈꿔 본다.



엄 태 수
(주)SMS EDU 대표이사

고객감동의 가치추구 에코가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미디어

경영저널, 조감도, 3D영상물제작



창업컨설팅

프랜차이즈컨설팅, 소자본창업컨설팅, 상권분석



(주)에코

대표전화 : 1644-1368 | TEL : 053)766-1368 | FAX : 053)766-1356



경영정책연구사업

경영진단, 여론·시장조사 등



원가회계연구사업

제조·공사·용역 원가계산 등



재정경제연구사업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조사, 공공요금산정 등



조사분석연구사업

개발부담금 산정·검토, 계약금액조정(E/S,D/S)등



(재)한국행정자치연구원 대표전화 1644-2061

본 원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2번지 801호 TEL.(055)261-1328 FAX.(055)261-1329
서울경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19-1번지 TEL.1644-2061
울산부산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803-12번지 TEL.(052)223-2261